

국민 10명 중 6명 ↑, '주69시간' 개편 반대

한국노총 설문조사...반대 66%·찬성 29.6% “노사 공감대 형성 후 사회적합의 거쳐야” 71.8% “노사 합의 결정, 대등한 위치서 못해”

10명 중 6명이 넘는 국민이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간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대가 66%, 찬성이 29.6%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노동시간 확대가 향후 노동자 일·생활 균형(워라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47.4%, '약간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13.1%로 부정적 응답(60.5%)이 긍정적 응답(36.2%)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노사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는 것에는 61.1%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시민들은 이 같은 노동시간 개편을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8%가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결정하지 못한다고 답해, 그렇다고 응답한 19.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주장하는 노사 자율적 협의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관련 노사합의는 사실상 사측 요구가 관철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직부성과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국민 과반수(52.8%)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 우선 직부성과급 도입이 향후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4%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27.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여론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상당수가 정부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개편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희면기자



광주 동부소방,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 행사 실시

광주 동부 소방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남계·화산·동산·칠전·동계마을(5개소)에 대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곡성소방, 제61회 소방의 날 불조심 거리 캠페인 실시

곡성소방서는 지난 9일 제 61회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제 61회 소방의 날 불조심 거리 캠페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구례소방, “깜박 가스 불” 가스콕 설치로 안심

구례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는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가스콕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신안소방, 섬지역 방문활동해 노후화된 소방시설·주택 안전점검

신안 소방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안전순찰대 섬지역 방문활동으로 노후화된 소방시설 및 주택 안전점검 및 실시하였다. 신안=이덕주기자



장성군, 산불 예방활동 집중... 소각행위 단속 나서

장성군이 겨울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군은 이달부터 산불 헬기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동원해 본격적인 산불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장성=김수권기자



여수해경, 해양오염 예방 위해 종사자 의식 개선 나서

여수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해상 오염물질 이송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해양오염의 예방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채본부

‘12살 의붓아들 살해’ 계모, 법정서 “남은 자녀 돌봐야 한다”

12세 의붓아들 1년간 상습 학대·폭행한 혐의

12세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계모가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의 남은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계모 A(43)씨와 친부 B(40)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9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7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를 들어 쌍방 항소했다.

A씨와 B씨는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서 나타났다. 자신의 자녀를 품에 안은 채 입정한 A씨는 재판 내내 방청석을 등지고 앉아 있었으며 B씨는 연신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는 “사망 당시 아동의 건강 상태나 당시 확인되는 상해 정도, 가해진 학대 정도 빈도 등에 비

취보면 살해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인이다”라고 항소 이유를 들었다.

반면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한다”면서도 “남아 있는 어린 자녀를 위해 다소나마 징역형을 감경해달라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기엔 의심스러운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해 의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범의학 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 당시 사용된 도구 중 일부만 인정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고자는 취지에서다.

검사는 “원심은 범행도구로 연필만을 인정했는데 객관적인 상황에서 발견된 여러 뾰족한 도구에도 혈흔이 발견됐다”며 “육안으로도 (C군의 시신에는) 약 200개의 자상이 있어 피고인의 일방

진술로 범행도구가 인정된 데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C군의 친모 D씨는 취재진에게 “(C군이) 사망 당일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혈흔이 묻어있다”며 “아이가 마지막에 있던 방에도 혈흔이 있는데 어떻게 (아동살해가 아니라) 치사로 판명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며 항소심에선 (A씨 등이)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친부인 B씨도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아이의 보증을 양도하라고 강요한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0일 C군의 감정인과 D씨를 각각 감정, 양형증인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연필로 C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C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도 지난해 친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우나기자



‘죽음으로 내몰았다’

여있다.

지난 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도중 가습기 살균제 파동 당시 가장 많이 팔렸던 대표 제품들이 책상 위에 놓여있다.

“5·18단체, 특전사와의 공동 선언문 폐기 진정성 보여라”

광주 시민 단체가 일부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를 향해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특전사회와 함께 발표한 2·19 공동선언문 폐기 논의와 관련한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민대책위는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2·19공동선언문 폐기에 진정성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부상자회 이사진은 지난달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전사회와의 대국민 공동선언서 등에 대해 이사회·총회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며 “정성국 공로자회장도 지난 6일 단체 주도 하에 공동선언문에 대해 폐기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2·19공동선언은 실체가 없는 기만적인 쇼였다가 것이 확인됐다. 이를 주도한 황일봉 부상자회장과 정 회장이 이사회를 통한 자격정지가 논의되고 두 단체 안팎으로 변진 이권다툼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같은 5·18 단체의 행보는) 시·도민들의 지탄의 대상은 물론이고 광주공동체의 먹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두 공법단체는 지금이라도 2·19공동선언 폐기와 시·도민에게 사죄 등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아울러 정 회장의 입장문 내용 중 (자신들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의 당초 취지가 오늘날 ‘5·18 학살세력의 포용으로 왜곡 발전’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특전사회는 지난 2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이 저지른 학살 만행을 ‘군인으로서 명령에 의한 공적 직무를 수행한 과정이었다’고 정의했다.

이에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 199개 단체가 연합한 대책위를 출범하고 현재까지 공동선언문 폐기와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선욱기자